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11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규남, 김동욱,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송경택, 이종배,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최민규, 황철규 의원(12명)

1. 주문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증가와 예산 심사규모의 확대, 지역민원의 복잡화 및 다양화 경향을 감안할 때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 2인을 지원하는 현 체제로는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청년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청년 인구 감소 및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로 인한 정치적 소외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대 및 청년층의 정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인턴제도’의 도입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 왔음.

○ 32년 만의「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책지원관 채용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량이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날로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움.

○ 또한 최근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 추세이고 각종 선거에 있어 청년층의 투표율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 등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치에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청년 고용을 증대시키고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청년층을 정치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인 '청년인턴제도'의 도입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4.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진「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가속화되는 등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루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또한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안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역 민원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 대응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만 임용이 가능하여 현재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 2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와 예산 심사규모의 증가 추세 및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지역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았을 때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 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인력 운용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선거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년의 입장을 정치에 반영하는 통로가 좁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청년 고용을 증대시키고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며 정치에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청년층의 정치 활동 활성화 및 정치 유입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인턴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지방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및 청년 고용 증대, 청년층의 정치 유입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인턴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바이다.

2024.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